

충남리포트 제211호

ChungNam Report

2016. 3. 3.

CONTENTS

〈 요 약 〉

1. 소지역 공간데이터 구축의 중요성
2. 충남 기초공간데이터 구축
3. 충남 자연마을 인구 특성 분석
4. 충남 한계마을(과소·고령) 현황
5. 시사점



충남 기초공간데이터 구축을 통한 자연마을 과소·고령 실태 분석

윤정미

충남연구원 농촌농업연구부 연구위원, coco@cni.re.kr

본 연구는 국내에서 구축된 적 없는 소지역(자연마을, 행정리)의 공간경계 데이터 구축 및 2014년 실거주 인구를 조사·구축하고 충남 자연마을 차원의 과소·고령화 현황을 분석하여 기초정책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요약

- 국내에서 다뤄진 바 없는 '자연마을'의 공간적 경계를 자체적으로 구축하여 '실거주 인구 분석' 및 '과소 고령마을'을 주제로 충남의 공간특성을 분석하였음
- 기초공간데이터는 행정리, 자연마을 차원을 의미
 - 행정경계 위계는 시군/읍면동/법정리/행정리/자연마을 등으로 구분
 - 자연마을 : 취락, 부락의 의미와 동일하게 사용되며, 행정리 범위 내에서 개발(아파트, 전원마을, 공공시설 개발)로 인하여 취락, 부락의 의미가 사라진 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의미
- 연구 결과 인구 20명 이하 실거주 자연마을은 32.4%(3,512개소)로 조사되었고, 65세 고령화 50% 이상은 시급 36.3%, 군급 46.1%로 매우 높게 분석되었음
- 충남 인구 20명 이하이면서 동시에 65세 고령화 50% 이상 자연마을(일명 '한계마을') 분석 결과 시급 15.4%, 군급 평균 20.1%로 충남의 한계마을 분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도출
- 그동안 소지역에 대한 데이터가 구축되지 않아 지방중소도시의 과소·고령화,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진단 등이 어려웠으나, 이 데이터를 기초로 마을차원의 정확한 진단 및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 활용이 기대됨

[충남연구원 '정책지도' 창간호 및 제2호 참조]

소지역 공간데이터 구축의 중요성 ◀

01

- 정보의 활용 및 이용에 대해 많은 중요성이 부각되어 있는 현 시점에서 충청남도의 마을차원의 연구 및 정책수립의 기초가 되는 기초 데이터, 즉, 소지역에 대한 기초 데이터가 구축되지 않아 마을차원의 정책 개발 및 의사결정자의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음
- 다시 말해 기존의 통계데이터는 읍면동 또는 법정리 단위의 데이터가 구축되어 있으나, 지역 연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자연마을단위, 최소한 행정리 차원의 공간 및 통계데이터가 필요한 실정
- 충청남도 마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마을 단위의 진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분석의 공간단위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기존 시군구, 읍면동, 법정리 단위가 아닌 이보다 소지역(small area) 단위인 행정리, 자연마을 차원의 분석 필요
- 이에 본 연구는 마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충청남도 기초 공간데이터를 구축하고 향후 소지역 단위의 공간데이터 활용 방안에 대한 제시를 목적으로 함

02

▶ 충남 기초공간데이터 구축

1) 데이터 구축 범위

- 본 연구는 전국 최초로 시도된 것으로, 데이터 구축 방법론 설정 및 충청남도 기초공간, 속성데이터를 구축함
- 기초공간은 법정리, 행정리, 자연마을 차원을 의미하며 여기서는 기준에 제공되는 법정리를 제외한 행정리와 자연마을 데이터 구축 · 분석
 - 행정경계 위계 시군–읍면동–법정리–행정리–자연마을로 구분
 - 자연마을 : 취락, 부락의 의미와 동일하게 사용되며, 행정리 범위 내에서 취락, 부락의 의미가 사라진 지역을 제외한 지역
 - 소지역 : 시급의 동지역을 제외한 행정리 내 관할지역 공간적 범위. 행정리 범위 내의 개발이 진행된 공간도 포함하고 앞서 정의한 자연마을을 포함한 행정리 관할구역을 의미

[표 1] 기 구축 자료 현황 및 구축 데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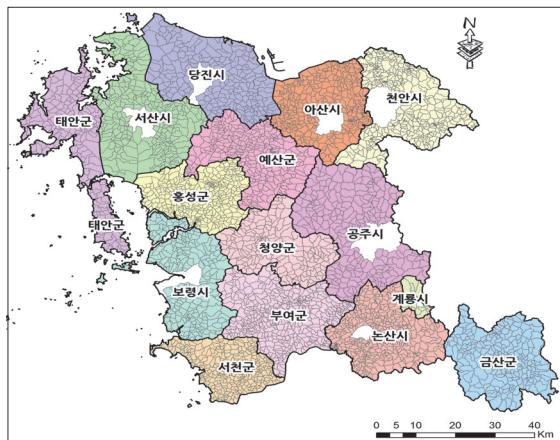
구분 공간위계	인구 구조 현황	인구 추계	경계지도(공간데이터)	소지역 경계
국가	○ 통계청 제공	○ 통계청 제공	● KLIS 제공	-
시도	○ 통계청 제공	○ 통계청 제공	● KLIS 제공	-
시군	○ 통계청 제공	○ 통계청 제공	● KLIS 제공	-
읍면동	○ 통계청 제공	-	● KLIS 제공	-
법정리	-	-	● KLIS 제공	● KLIS 제공
행정리	-	-		구축 필요
자연마을	-	-		구축 필요

2) 데이터 구축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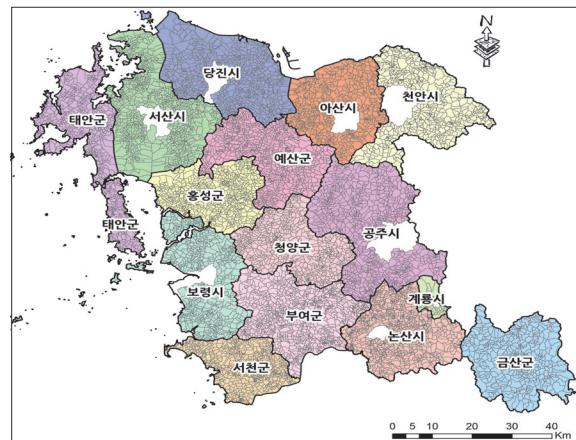
- 자료 구축 기본 자료는 국토부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자료인 읍면동, 법정리 공간 데이터를 이용하여 자료 보완 및 수정
- 구축된 공간데이터 결과 행정리 4,242개소, 자연마을 10,860개소, 소지역 11,217개소로 조사되었음(군사지역 등의 사유로 인해 계룡시 제외)
- 구축된 속성데이터는 행정리와 자연마을의 총인구수, 65세~74세 인구, 75세 이상 인구 구축

[표 2] 구축된 행정리와 자연마을 수

시군	법정리	통계연보상 행정리	구축된 행정리	자연마을수※	소지역수
천안시	148	430	427	510	595
공주시	161	245	245	1,021	1,026
보령시	101	235	235	701	705
아산시	144	398	398	610	727
서산시	125	264	265	1,015	1,030
논산시	174	421	424	999	1,032
당진시	137	221	221	787	796
계룡시	14	56	—	—	—
금산군	106	254	255	455	474
부여군	191	433	433	969	992
서천군	173	315	316	807	819
청양군	115	183	183	651	661
홍성군	141	336	342	717	731
예산군	177	311	311	868	898
태안군	65	186	187	720	731
계	1,907	4,288	4,242	10,830	11,217



[그림 1] 충청남도 행정리 경계



[그림 2] 충청남도 자연마을 경계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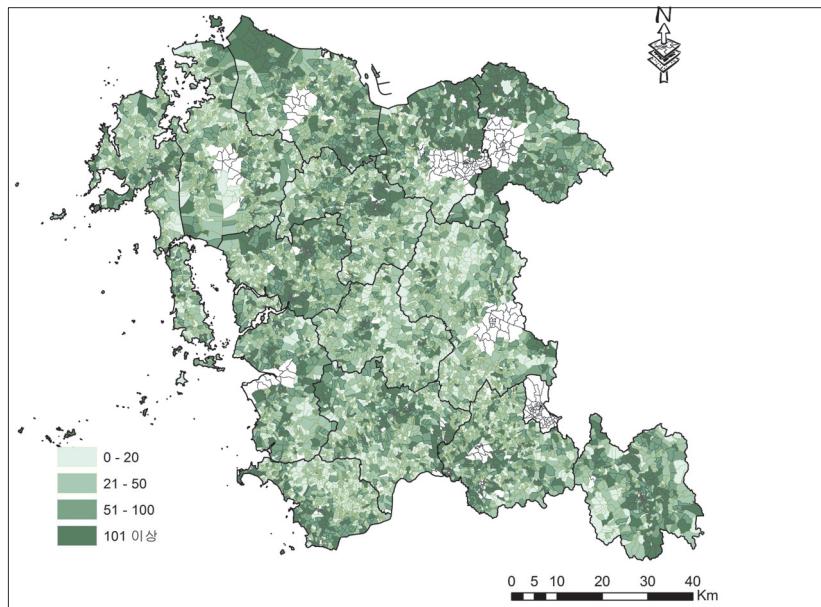
▶ 충남 자연마을 인구 특성 분석

1) 자연마을 인구 현황

- 인구 20명 이하의 과소 인구 자연마을은 32.4%, 21~50명 이하는 36.5%
 - 서천군 46.6%, 서산시 41.1%, 청양군 40.1%로 과소 자연마을이 매우 많음
 - 과소 인구는 마을 공동체 형성 및 마을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가장 밀접하게 영향을 주기에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진단 필요
- 시급과 군급으로 비교하면 20명 이하 인구의 경우 시급 30.6%, 군급 34.5%로 군급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다른 구간에서는 거의 유사

[표 3] 자연마을 인구분포

구분	자연 마을수	0~20명		21~50명		51~100명		101명 이상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천안시	510	66	12.9	115	22.5	149	29.2	180	35.3
공주시	1,021	403	39.5	424	41.5	134	13.1	60	5.9
보령시	701	205	29.2	241	34.4	168	24.0	87	12.4
아산시	610	168	27.5	183	30.0	126	20.7	133	21.8
서산시	1,015	416	41.0	395	38.9	134	13.2	70	6.9
논산시	999	291	29.1	396	39.6	199	19.9	113	11.3
당진시	787	176	22.4	308	39.1	184	23.4	119	15.1
금산군	455	98	21.5	138	30.3	111	24.4	108	23.7
부여군	969	363	37.5	324	33.4	181	18.7	101	10.4
서천군	807	376	46.6	247	30.6	107	13.3	77	9.5
청양군	651	261	40.1	260	39.9	90	13.8	40	6.1
홍성군	717	173	24.1	281	39.2	156	21.8	107	14.9
예산군	868	274	31.6	358	41.2	161	18.5	75	8.6
태안군	720	242	33.6	282	39.2	121	16.8	75	10.4
계	10,830	3,512	32.4	3,952	36.5	2,021	18.7	1,345	12.4



[그림 3] 시군별 자연마을 인구분포(2014년 실거주 인구)

- 인구 101명 이상의 자연마을은 천안시 35.3%, 금산군 23.7%, 아산시 21.8%, 당진시 15.1%, 홍성군 14.9%의 순으로 도출
 - 금산군과 홍성군의 경우 각각 대전과 내포신도시와의 접근성이 양호하여 거주 인구가 많이 분포된 것으로 보임
- 반대로 101명 이상 거주 인구 분포가 매우 낮은 시군은 공주시, 서산시, 서천군으로 도출

2) 자연마을 고령화(65세 이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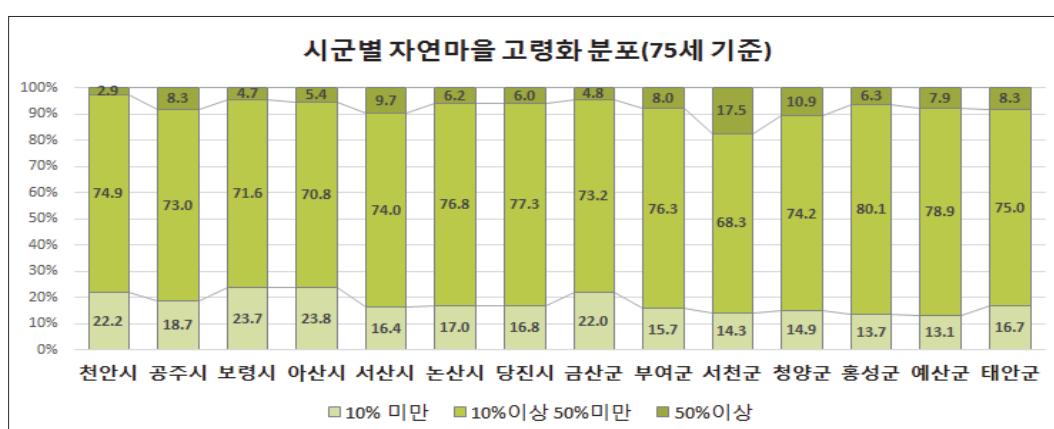
- 자연마을 실거주 인구기준 고령화(65세 이상) 분석 결과 “고령화 50% 이상” 진행된 자연마을은 서천군 58.0%, 태안군 54.3%, 서산시 47.6%, 청양군 47.0%
- 고령화 비율이 50% 이상인 자연마을 비율은 군급 46.1%, 시급 36.3%로 확연히 시급보다 군급의 고령화가 심각한 것으로 분석
- 고령화 50% 이상 진행된 자연마을 분포도를 살펴본 결과 서해안 인근지역과 논산시, 금산군의 축을 따라 고령화가 많이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음

[표 4] 시군별 자연마을 고령화 분포(65세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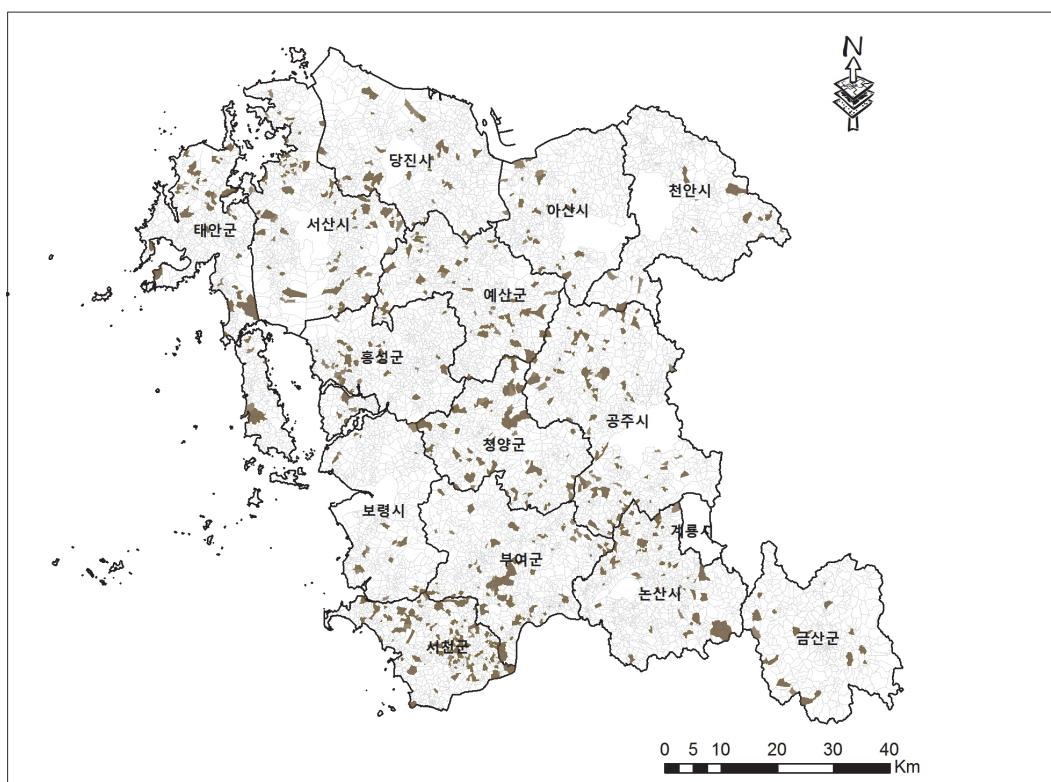
구분	10% 미만	10%이상 20%미만	20%이상 30%미만	30%이상 40%미만	40%이상 50%미만	50%이상
천안시	4.7	8.6	25.1	24.9	13.5	23.1
공주시	5.6	6.9	12.3	20.2	18.3	36.7
보령시	5.6	7.3	16.7	19.3	18.0	33.2
아산시	8.9	8.9	18.0	18.2	14.4	31.6
서산시	5.2	3.7	10.8	15.1	17.5	47.6
논산시	4.4	4.0	11.8	19.4	18.2	42.1
당진시	2.3	5.7	14.4	19.3	18.6	39.8
금산군	3.7	7.5	17.4	16.7	13.8	40.9
부여군	5.2	3.7	12.9	19.6	15.2	43.4
서천군	4.1	2.7	7.6	11.2	16.5	58.0
청양군	4.9	4.1	12.3	18.1	13.5	47.0
홍성군	3.8	4.0	12.4	20.6	23.4	35.7
예산군	1.6	2.9	13.5	20.2	18.5	43.3
태안군	3.5	4.3	9.2	15.8	12.9	54.3
시급	5.2	6.4	15.6	19.5	16.9	36.3
군급	3.8	4.2	12.2	17.5	16.3	46.1

3) 자연마을 고령화(75세 이상) 현황

- 현재 농촌지역은 고령화가 심각하여 65세 기준의 고령화는 실태와 맞지 않기에 농어촌 실태를 고려한 75세 이상 기준 고령화 분포를 분석함
- 그 결과 75세 이상 고령화가 50% 이상 진행된 자연마을은 서천군 17.5%, 청양군 10.9%로 고령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왔으며, 천안시 2.9%, 보령시 4.7%, 금산군 4.8%, 아산시 5.4%로 고령화된 자연마을 비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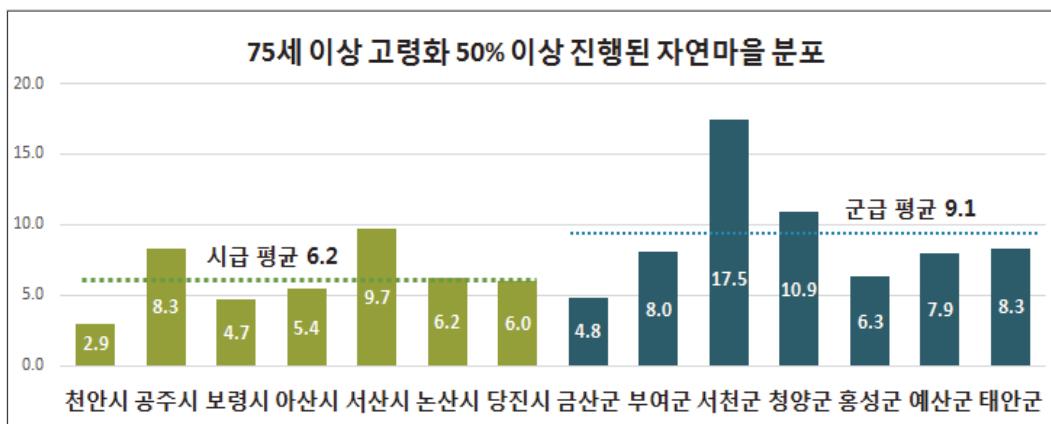


- 시급과 군급의 75세 이상 고령화 분포 결과 고령화 50% 이상 진행된 자연마을의 비중이 군급 9.1%, 시급 6.2%로 군급이 높게 도출되어 군급의 고령화가 심각한 것으로 분석됨



[그림 4] 75세 고령화 50% 이상 진행된 자연마을 분포

- 75세 고령화 50% 이상 진행된 자연마을 분포 분석 결과 서천군 17.5%로 군급 평균 9.1% 보다 약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금산군의 경우 시급 평균보다 낮게 도출되었음



04

▶ 충남 한계마을(과소·고령) 현황

- ‘한계마을’이란 인구가 과소하고 고령화된 마을을 의미하며 과소·고령으로 인해 공동체가 붕괴될 우려가 있는 마을로 정의함
 - 일본에서는 이와 관련된 많은 연구 및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논의 및 연구가 시작되고 있는 실정
-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자연마을 차원뿐만 아니라 행정리 차원의 데이터조차 없었기에 한계 마을에 실태 진단 분석 연구는 없음
 -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에서 구축한 자연마을 공간경계 및 인구에 대한 속성 자료는 한계 마을 연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함
- 본 장에서는 다음에 대한 진단을 실시
 - 자연마을 인구 20명 이하와 65세 고령화 50% 이상의 한계마을
 - 자연마을 인구 10명 이하와 75세 고령화 50% 이상의 한계마을

1) 인구 20명 이하와 65세 고령화 50% 이상 자연마을

- 분석 결과 서천군 30.7%, 서산시 25.0%, 태안군 22.6%, 청양군 22.4%, 공주시 19.5%로 도출되었으며, 군급 평균 20.1%, 시급 평균 15.4%로 군급의 한계마을 분포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도출
- 시급과 군급을 살펴보면 군급에서는 서천군, 태안군, 청양군, 부여군이 한계마을의 비중이 높으며, 금산군과 홍성군의 경우 충남의 다른 시보다도 한계마을 분포가 다소 낮은 것으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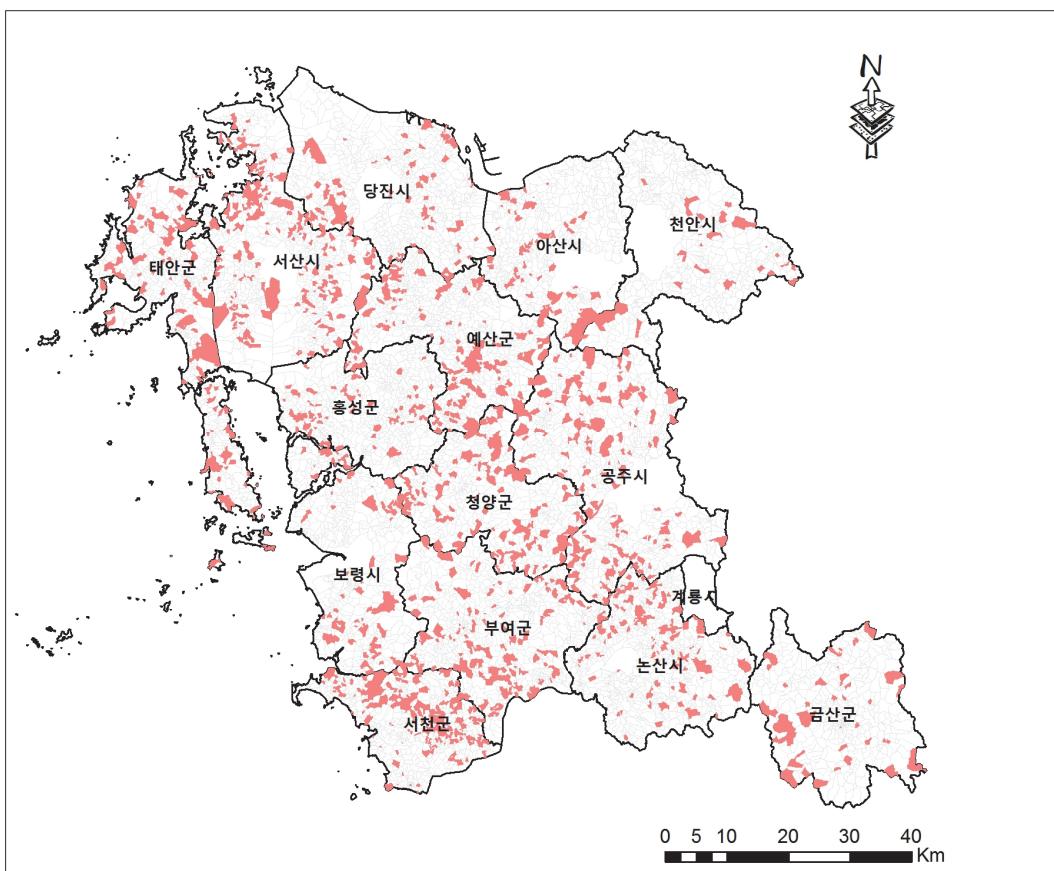
- 시급에서는 서산시가 한계마을 분포가 매우 높게 나타났기에 서산시와 공주시는 한계마을에 대한 연구가 시급히 진행되어야 할 것임

- 한계마을의 비율이 가장 낮은 시군은 천안시 6.7%, 아산시와 홍성군 12.1%, 금산군 12.7%로 분석되었음

- 이 자료는 시군 읍면의 이장단을 대상으로 조사된 자료이기에 한계마을에 대한 심각성 및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자료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 재조사가 수행되어 정확성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함

[표 5] 시군별 인구 20명 이하와 65세 고령화 50% 이상 한계마을 분포

구분	자연마을 개소(수)	한계 자연마을 개소(수)	비율(%)	평균
천안시	510	34	6.7	15.4
공주시	1,021	199	19.5	
보령시	701	103	14.7	
아산시	610	74	12.1	
서산시	1,015	254	25.0	
논산시	999	162	16.2	
당진시	787	106	13.5	
금산군	455	58	12.7	20.1
부여군	969	203	20.9	
서천군	807	248	30.7	
청양군	651	146	22.4	
홍성군	717	87	12.1	
예산군	868	170	19.6	
태안군	720	163	2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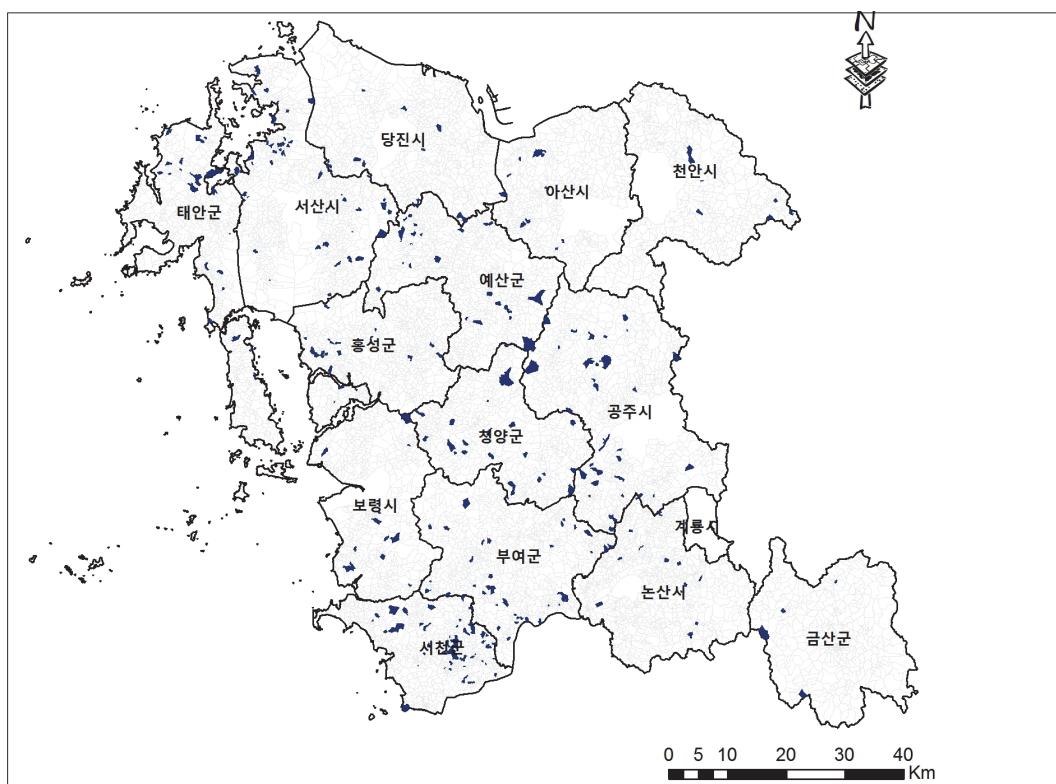
[그림 5] 한계마을 현황(인구 20명 이하, 65세 고령화 50% 이상)

2) 인구 10명 이하와 75세 고령화 50% 이상 자연마을

- ◉ “인구 10명 이하와 75세 고령화 50% 이상” 한계마을 분포를 살펴보면 서천군 64개, 서산시 48개, 부여군 39개, 공주시 38개, 자연마을 개소수 대비 비율로 살펴보면 서천군 7.9%, 서산시 4.7%, 청양군 4.0%, 공주시 3.7%, 태안군 3.6%로 분석
- ◉ 금산군의 경우 한계마을 비율이 낮게 도출되어 금산군 지역적 특성 및 귀농귀촌 정책, 마을 사업 등에 대한 분석·진단 후 지역 맞춤형 정책 검토 수행 필요

[표 6] 시군별 인구 10명 이하와 75세 고령화 50% 이상 한계마을 분포

구분	자연마을 개소(수)	한계 자연마을 개소(수)	비율(%)	평균
천안시	510	6	1.2	6.9
공주시	1,021	38	3.7	
보령시	701	17	2.4	
아산시	610	10	1.6	
서산시	1,015	48	4.7	
논산시	999	13	1.3	
당진시	787	15	1.9	
금산군	455	4	0.9	9.1
부여군	969	39	4.0	
서천군	807	64	7.9	
청양군	651	26	4.0	
홍성군	717	20	2.8	
예산군	868	25	2.9	
태안군	720	26	3.6	



[그림 6] 한계마을 현황(인구 10명 이하, 75세 고령화 50% 이상)

05

▶ 시사점

- 충청남도 모든 도민이 정책서비스의 긍정적 파급효과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매우 중요한 과제임
- 정책의 종류와 목적에 따라 정책 발굴 시 요청되는 공간적 범위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소지역(small area) 차원의 데이터는 구축되지 않은 실정
- 지방중소도시의 과소·고령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소멸가능성이 있는 한계마을 등에 대한 심각한 사회문제가 나타날 수 있기에 향후 지방중소도시에 대한 정확한 진단에 따른 정책 수립을 위한 소지역 차원의 데이터가 필요한 시점임
 - 마을에 대한 정의, 마을단위의 기초데이터 조사 항목 선정, GIS를 활용한 데이터 체계적 구축 방법에 따라 데이터를 구축하였고, 2014년 기준 실거주 인구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하여 자연마을별 인구 및 고령화 현황을 분석함
- 또한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고령·과소화마을 즉, 한계마을에 대한 분석 수행 및 고령화 지역에 대한 군집 지역을 도출하였음
 - 소지역 데이터 활용방안으로는 농어촌지역의 시급한 현안인 응급부문과 교통사고, 구조구급, 주거환경, 복지부문의 다양한 부문에 활용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농촌복지부분의 대중교통과 생활 인프라 자료를 연계한 농촌 소지역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주민 체감적 농촌 삶의 질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방안 설정이 가능
- 또한 충청남도 삶의 질에 관한 연구 및 마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 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해줄 것으로 기대

윤정미 연구위원
충남연구원 농촌농업연구부
041-840-1203, coco@cni.re.kr

※ 본 리포트는 충남연구원 2014년도 전략과제 「충남 기초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방안 연구Ⅰ – 마을차원의 기초공간데이터 구축 –」을
재정리한 것임.

◆ 참고자료 ◆

- 김종근 외, 2015, 충청남도 행정통·리 마을의 최근(2005~2010년) 변화와 시사점, 충남연구원
- 윤정미, 2014, 충남 기초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방안 연구 I, 충남연구원
- 정경희 외, 2014, 일본 ‘한계취락(限界聚落)’의 인구감소 대책방안 사례연구, 한국주거학회 제25권
제3호
- 조영재 외, 2013, 과소화·고령화에 대응한 ‘한계마을정책’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 충남연구원
- 최은영 외, 2014, GIS에 기반한 충청남도 농어촌마을의 변화 분석(2005~2010), 충남연구원

충남리포트(2015년~현재)

구분	제 목	집필자	발행일
2015-01	충남 야생동식물 서식현황 및 생물다양성 증진 방안	정옥식	2015.01.05
2015-02	지역단위 중소기업 지원 플랫폼 구축 방안	신동호	2015.01.13
2015-03	충청남도 문화예술 비전과 발전전략	박철희	2015.01.26
2015-04	충청남도 행정리 단위 마을의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 특성	최은영 외	2015.02.03
2015-05	충청남도 도서(島嶼) 특성과 발전방향	한상욱	2015.02.12
2015-06	충청남도 행정통·리 마을의 최근(2005~2010년) 변화와 시사점	최은영 외	2015.02.17
2015-07	2015년 충남 GRDP 전망 – GRDP 100조 시대 충남의 새로운 도약	김양중	2015.02.25
2015-08	글로벌 차원의 산업정책 패러다임 변화와 시사점	정준호	2015.03.05
2015-09	신균형발전을 위한 다종적 균형정책	박배균 · 김동완	2015.03.12
2015-10	사람 중심의 통합적 균형발전정책	조명래	2015.03.20
2015-11	삽교호 수계! 충남형 유역관리방안의 선제적 추진이 필요하다	김영일 외	2015.03.26
2015-12	하구의 생태적 가치! 무엇이 가로막고 있는가?	이상진	2015.04.01
2015-13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한 새로운 균형발전 담론과 실천 과제	강현수	2015.04.10
2015-14	충남지역 전력요금 치등화 방안 – 전력요금의 지역신호 강화 방안 –	이인희	2015.04.16
2015-15	충남의 철강산업 실태와 발전방향	백운성	2015.04.17
2015-16	충남 논습지의 생태계서비스 가치 평가	사공정희	2015.04.22
2015-17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으로서 농업직불금 확대 필요	강마야 · 이관률	2015.04.24
2015-18	충남 “미더유” 현황과 발전전략	권오성	2015.04.29
2015-19	충청남도 농촌중심지 활성화 정책의 과제와 전략	이상준 외	2015.05.01
2015-20	충남 도민이 꿈꾸는 행복한 성장	김양중 · 백운성	2015.05.15
2015-21	양봉산업의 의의와 발전가능성	이관률	2015.05.19
2015-22	충남 저소득층 복지정책의 현황 및 개선방안	류진석	2015.05.28
2015-23	과소화·고령화 된 농촌마을, 유형별 재편이 필요하다	조영재	2015.06.05
2015-24	충남의 환경보건정책 로드맵이 필요하다	명형남	2015.06.12
2015-25	충남 로컬푸드 직매장의 실태 및 성공전략	김종화	2015.06.19
2015-26	지역자원시설세, 현명한 세수활용이 필요하다	이민정 · 어형범	2015.06.26
2015-27	충남의 사회적경제, 자산 활용과 시·군 중심 추진이 바람직하다	송두범 · 박춘섭	2015.07.03
2015-28	충청남도 통합디자인을 위한 사전진단지표 구축 방안	이충훈	2015.07.10
2015-29	수소연료전지산업의 최신동향과 충남의 대응 방안	이항구	2015.07.17
2015-30	도민의 주거환경 만족도로 본 충남의 주거환경정책 추진방향	임준홍 · 흥성효	2015.07.23
2015-31	현대자동차와 충남의 상생발전 방안	김양중	2015.07.31
2015-32	메르스 사태를 통해 본 충남의 감염병 발생현황과 정책제언	명형남	2015.08.12
2015-33	미국의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을 위한 민관파트너십 사례와 시사점	홍원표 · 강수현	2015.08.20
2015-34	충남의 지속가능발전지표 관리방안	이관률 · 송두범	2015.08.27
2015-35	충남의 제조업 총요소생산성 분석	이준표	2015.09.03
2015-36	충청남도 특성에 적합한 물 재이용 체계 구축방안	이원태 · 김영일	2015.09.10
2015-37	충청남도 온실가스배출 특성 및 전략적 대응 방향	정종관 외	2015.09.17

구분	제 목	집필자	발행일
2015-38	충남도민의 언론매체 이용 실태와 효율적 정책홍보 방안	박경철	2015.09.22
2015-39	충남시민사회단체 활동가 교육 현황과 활성화 방안	김지훈	2015.10.08
2015-40	일본 후쿠오카현의 수소프로젝트 사례와 시사점	이민정	2015.10.13
2015-41	충청남도 농어업회의소 설치 및 운영방안	임성규 · 정명채	2015.10.22
2015-42	농협과 함께 하는 지역맞춤형 농정혁신모델	김기현	2015.10.27
2015-43	'도는 도답게' 광역자치단체로서 도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	권선필	2015.10.29
2015-44	충남 지방문화원의 운영실태 및 발전방안	최영화	2015.11.05
2015-45	충남의 의료서비스 취약지역 현황과 도민 건강 정책 방안	임준홍 · 이경주	2015.11.12
2015-46	중국 관광객(요우카, 遊客)의 충남 유치 전략 마련	박인성	2015.11.16
2015-47	충남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김성욱 · 최정석	2015.11.23
2015-48	적극적인 커뮤니티시설 도입을 통해 충남 전통시장을 활성화하자	이상준	2015.11.27
2015-49	대체자동차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충남의 정책 방안	김양중	2015.12.03
2015-50	충남 흥동 유기농업의 특징과 과제	김기홍	2015.12.10
2015-51	수도권에 집중된 대기측정망, 충남 도내 확대가 필요하다!	명형남	2015.12.17
2015-52	한중FTA에 따른 충남 농림어업 분야 영향과 대응방안 구상	강마야	2015.12.20
2015-53	금강의 미래, 금강비전으로 말하다	이상진 · 김영일	2015.12.30
2016-01	행복한 성장을 위한 꿈과 도전, 충남경제비전 2030	강현수 외 2명	2016.01.04
2016-02	공공부문 개혁 요구와 충남에 대한 시사점	김대호	2016.01.07
2016-03	민주주의 패스포트를 통한 로컬거버넌스 구축 방안	김욱 외	2016.01.14
2016-04	금강 중 · 하류의 물 환경 특성과 큰빗이끼벌레 서식에 따른 대응방안	정종관	2016.01.20
2016-05	충청남도 제조업 개별입지 관리방안	오용준	2016.01.28
2016-06	충청남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방안	김용현	2016.02.04
2016-07	우리나라 공무원 인사제도 혁신 방안	윤태범	2016.02.12
2016-08	충청남도 지역경제 생산성의 특징과 정책 과제	이종윤 · 임재영	2016.02.17
2016-09	충청남도 서해안 지역의 발전방향과 추진과제	한상욱 · 임형빈	2016.02.19
2016-10	지역에너지 전환과 충남의 에너지정책 방향	여령범	2016.02.24

▣ 충남연구원 홈페이지(www.cni.re.kr)에서 쉽게 볼 수 있으며, 인용시 출처를 정확히 밝혀주세요!

▣ 본 연구보고서는 충남연구원의 자체보고서로 발간된 것이며, 충남도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